
일제강점기 경주의 유물 반출 · 훼손과 조선인의 대응

－ 신라옥적과 일승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

아라키 준*

목 차

I. 머리말

II. 신라옥적을 둘러싼 경합

1. 소네 부통감의 신라옥적 반출
2. 신라옥적의 반환

III. 일승각과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

1. 1937년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의 전개
2.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의 배경
3. 보존된 일승각

IV. 맺음말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객원연구원.

본고는 연구자가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과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식민지기 경주 유적 · 유물의 미시정치: 다양한 이항대립의 교차』의 일부를 수정·보완함 것임을 밝힌다.

접수일: 2020.9.8. 심사완료일: 2020.11.8. 게재확정일: 2020.11.8.

국문요약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일본인들은 조선의 유적·유물에 대한 고적조사를 실시하여 본인들의 논리에 맞추어 유적·유물을 해석하고 식민통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고적조사 연구에서는 주로 그러한 일본인들의 논리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조선인은 수동적 객체로 그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자칫 민중 부재의 타율사관을 재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평양지역과 함께 고적조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실시된 경주를 무대로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조선인의 논리나 저항을 포착하고 부각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라의 명보로 조선인들이 간직하였던 신라옥적과 조선왕조기 경주 부윤의 집무 공간으로 높은 위상을 지녔던 일승각에 관하여 반출 혹은 훼손을 도모한 일본인과 그것을 막으려고 한 조선인의 경합을 살펴보면 역사적 주체로서 조선인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당시 정치적 약자였던 조선인들은 유적·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행사나 시위와 같은 직접적 수단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유물을 감추거나 일본인 유력자의 정치력이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를 역이용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 반출된 신라옥적은 경주로 탈환할 수 있었고, 일승각은 이전되어 사찰로 활용하게 되었으나 건물은 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뚜렷한 윤곽을 잡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연구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유적·유물은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조선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논한 신라옥적이나 일승각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유적·유물을 지키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누적되면 조선고적조사에 대한 또 다른 역사연구 분야가 개척될 것으로 전망한다.

Ⅰ 주제어 Ⅰ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경주, 신라옥적, 일승각, 금관총

I. 머리말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는 한반도에서 실시된 최초의 체계적인 고고학 조사로서 해방 후 한국 고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¹⁾ 총독부의 조선 통치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 큰 영향을 받은 정치적인 조사였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총독부는 식민 이데올로기를 구성한 ‘일선 동조론’과 ‘조선 정체성론’ 등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근거를 찾는 수단으로 고적조사를 활용하려고 했고, 일본인 학자들도 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충실히 조사했다.

고적조사는 방법론으로는 서양에서 도입한 ‘과학적’ 기술을 동원했기에 완전히 학문성에서 동떨어진 조사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그때 남겨진 객관적 자료는 오늘날도 기초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통치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고적조사는 필연적으로 ‘폭력성’을 띠게 되어,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반출 혹은 훼손되는 원인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선고적조사에 대한 연구는 이상과 같은 총독부나 일본인 학자들의 논리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조선인은 수동적 객체로 간주되었다. 물론 정책연구의 속성상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한 통치자가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식민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역사학자 강동진이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는 그 주제의 성격에 의하여 피억압민족 측의 저항이나 반응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칫 민중 부재의 … 타율사관으로 빠질 수도 있다(밑줄 필자).”라고 경종을 울린 바가 있다(강동진 1979: p.6).

고적조사에 관해서도 이상과 같은 타율사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총독부의 논리나 행동과 조선인의 대응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당시 고적조사에 관련된 첨단기술과 방법론을 일본인 학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인이 주체적으로 고적조사에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고적조사에 관한 기록은 거의 모두 일본인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적조사에 관하여 조선인을 주체로 부각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유효한 방법론으로 역사인류학적 미시사(microhistoria) 방법론을 들 수 있다. 미시사는 정치사나 경제사로는 포착하기가 어려운 민중의 삶을 재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분

1) 한국인 연구자의 연구만 보아도 문화재 유출 문제를 다룬 황수영의 연구(1973), 고적조사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다룬 전경수(1998), 최석영(1999), 목수현(2000)의 연구, 각 지방의 고적조사를 다룬 국성하(2004), 겸현숙(2007), 정인성(2009), 함순섭(2009) 등의 연구, 조선고적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순자의 연구(2009)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야는 197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유럽 중세의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미시사의 방법론은 대상으로 하는 시대에서 남겨진 문서나 회화, 사진 등의 기록을 모아서 그 자료들 속에서 어떤 단서를 포착해 꼬리에 꼬리를 잡는 실마리 찾기의 수법이다. 이 방법은 인류학자가 과거의 자료들 사이를 드나들면서 실행하는 현지조사라고 할 수 있다(곽차섭 2000: p.30~32; 함한희 2003: p.271~277).

통치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고적조사의 ‘폭력성’은 조선인들이 간직했던 유적이나 유물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서 눈에 띄게 표출되었다. 동시에 사건의 ‘폭력성’이 크면 클수록 잠자듯이 잘 보이지 않았던 조선인의 논리나 저항이 첨예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 경우 만약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남긴 자료에도 조선인의 논리나 저항을 포착할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평양지역과 함께 고적조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실시된 경주를 무대로 미시사적 접근을 통하여 조선인의 논리나 저항을 포착하고 부각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라의 명보로 조선인들이 간직하였던 新羅玉笛과 조선왕조기 경주 부윤의 집무 공간으로 높은 위상을 지녔던 一勝閣에 관하여 반출 혹은 훼손을 도모한 일본인과 그것을 막으려고 한 조선인의 경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라옥적을 둘러싼 경합

신라옥적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명보 중의 명보로 신라왕조의 수도 경주의 정체성과 주민의 긍지를 지탱하여 오늘날까지 경주에서 전래되어 왔다. 신라 멸망 후 역대 왕실이 이것을 수도로 옮기려고 해도 문경 조령을 넘자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조령설’에 보이듯이 신라옥적은 경주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명보였다(조철제 2018b). 그러나 1909년 4월 경주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부통감 일행이 신라옥적을 경성으로 반출하여 이왕가 박물관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경 경주 지역주민의 힘으로 다시 경주에 반환하게 되었다. 신라옥적을 둘러싸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어떤 경합이 벌어졌을까? 조선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 신라옥적 반환에 성공했을까? 이하 그 전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네 부통감의 신라옥적 반출

1) 오사카 긴타로의 기술

경주고적보존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는 신라옥적의 반출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大坂六村[金太郎] 1939: p.221~222).

부통감 소네 子爵 경주 순시 때, 신라 전래의 옥적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고 체류 사흘 사이에 吏員에게 명하여 매일 수색시켰다. 내아, 일승각, 琴鶴軒, 襟視堂 등 모든 청사를 천장으로부터 마루 밑까지 찾았으나 도저히 찾지 못했다. 찾다가 못한 廳員은 마지막으로 薪炭창고의 구석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새까맣게 변색된 큰 쓰레기통 같은 함을 꺼내왔다.

‘그런 물건 속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소리도 있었으나 (옥적을 보관할 만한) 함 같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 일단 열어보기로 했다.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 망치로 뚜껑을 때렸다. 상판을 한 장 꺼내보니 안에서 또 함이 나타났다.

... 또 그 함의 상판을 깨보니 또 그 속에서 함이 나타났다. ... 용인이 신중하게 세 번째 함을 열어보니 안에서 油紙로 포장된 작은 함을 꺼냈다. ... 옥적은 이 함 속에 있었다. ... ‘이러한 귀중한 것을 이대로 놓아두면 안된다’라고 하는 부통감의 말씀에 이듬해 경성으로 옮겨 이왕가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이 글을 보면 신라옥적은 사흘간의 수색을 거쳐 ‘발견’되었고, 소네가 경성으로 반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의아스러운 구석을 두 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 소네 아라스케는 왜 사흘이나 열성을 올려 신라옥적을 수색하고 경성으로 반출하려고 했는가이고, 둘째, 신라옥적이 왜 엄중하게 쓰레기통과 같은 함에 포장되어 명보를 보관하는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신탄창고에 있었는가이다.

우선 신라옥적이 경성으로 반출된 동기부터 검토해보자. 신라옥적을 경성으로 반출하려는 목적이 기록된 문서는 발견된 바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옥적은 신라 멸망 이후 역대 정권이 거의 손을 댈 수 없었던 명보였다.²⁾

오사카에 따르면 신라옥적은 소네가 경주를 시찰한 이듬해, 즉 1910년에 경성으로 반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라옥적이 경성으로 반출되기 직전인 1909년 9월 2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2) 예외적으로 대원군 섭정시대(1864~1873년)에 한동안 한성으로 이송되어 실수로 파손된 바가 있다(關野貞 1904: 67). 이때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옥적은 다시 경주로 돌아왔다.

萬波息

萬萬波波 더 玉笛는, 新羅적에 奇物이라.

흔 曲調를 부는 곳에, 淸靜浪息 도흐시고.

至今에, 東海 淸波가 何도 危險하니, 흔번 부러.

위 기사에서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이하여 신라옥적에 국권 수호를 假託하려는 조선인의 필사적인 심정을 읽어낼 수 있다. 신라옥적은 바로 국권을 의미하는 조선 국보 중의 국보였고, 또한 고향인 경주에 두어야 하는 국보였다.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신라옥적이 경성으로 반출된다는 것은 바로 국권 상실을 상징하는 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한편 일본인도 신라옥적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왕가 박물관의 도록에는 신라옥적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李王職博物館 1918: p.108).

이 옥적은 조선에서 신라조로부터 전래되어 온 靈物로서 보존되었다. 따라서 (鮮人 國家 제일의 寶器로 思惟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소네가 왜 열성을 들여 신라옥적을 수색하고 경성으로 반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소네는 한일병합을 앞두고 한국 제일의 명보를 슬하에 뒹뒹으로써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조선인의 민족주의적 저항 의식을 말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신라옥적 경성 반출은 소네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의 글에서 소네는 마치 유물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귀중한 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한말기 일본인 학자가 본 신라옥적

그러면 이렇게 조선인들이 소중하게 여긴 신라옥적이 왜 ‘신탄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더욱 의문이 깊어진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한말기 신라옥적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기 처음으로 신라옥적을 본 일본인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였다. 그는 동경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조교수로서 동 대학의 명을 받아 1902년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62일 동안 한반도를 답사했다(關野貞 1904). 조사목적은 대한제국의 건축사를 연구하는 것이었으나 그 배경에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세키노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경주의 유적을 조사했다.

세키노는 경주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關野貞 2009: p.122~123).

… 정오 경주에 도착. 군수는 대구에 가서 부재이므로 首席書記의 周旋으로 映花樓에서 숙박한다. 누는 고래부터 樂府가 있어 온 장소이며 지금도 玉笛을 소장한다. 다만 抹樓와 小室 두 칸만 있을 뿐이다. …

이 기록을 통해서 세키노는 본인이 숙박한 ‘영화루’에서 신라옥적을 본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루’는 악부가 있어 온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디에 있었던 건물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조선시대 문서에도 경주의 ‘영화루’라는 건물 명칭을 찾을 수 없다.

1902년 세키노가 숙박하고 신라옥적을 보았다고 한 ‘영화루’는 어느 건물이었을까?³⁾ 다행히도 경주고적보존회의 중심인물이자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 초대 주임(관장격)을 맡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남긴 기록에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諸鹿央雄 1935: p.186).

선생이 처음으로 경주를 방문한 것은 지난 명치 35년(1902)이며 … 한국 당국의 알선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기생의 取締所(관리소의 뜻)라고 할 수 있는 官奴房의 일실에서 韓人 통역자와 함께 숙박하였고 … 후일 선생님께서로부터 그 당시 숙박소에서 자주 기생들이 관리하는 관노로부터 詰責되거나 구타 당하거나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밑줄 필자).

이 글은 1935년 7월 세키노가 돌연히 사망했을 때 모로가가 쓴 추도문인데, 세키노로부터 그가 숙박한 장소가 기생을 관리하는 ‘관노방’이라 들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경주를 답사하고 신라옥적을 보았을 때 “내가 여행할 당시는 군수 감독 밑에 기생의 敎長이 이것(신라옥적)을 보관하고 있었다(밑줄 필자).”고 기술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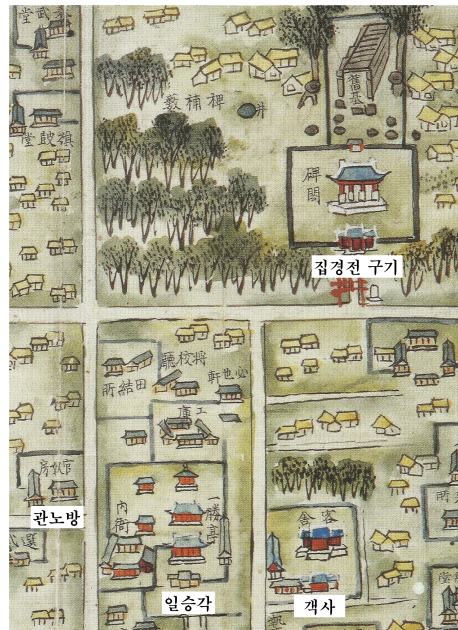


그림 1. 경주읍성전도(일부)
(국립경주박물관 2013)

3) ‘영화루’ 위치에 관해서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인성 교수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음을 밝힌다.

가 있어, 모로가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1902년 세키노가 숙박하고 신라옥적을 본 장소는 경주군 관아전물 밀집 구역 서쪽에 있었던 관노방이었다(그림 1). ‘영화루’는 관노방의 아호 혹은 별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키노는 신라옥적을 인상 깊게 관찰한 것 같다. 1904년 그가 작성한 보고서 『한국건축조사보고』에는 신라옥적의 내력과 함께 세부적인 스케치도 게재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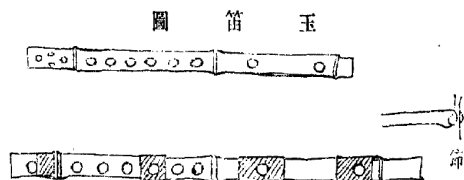


그림 2. 세키노가 스케치한 신라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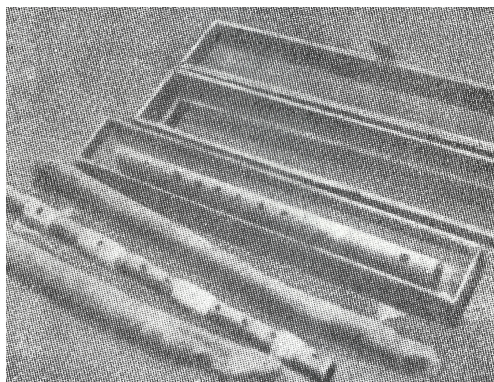


사진 1. 이마니시의 글에 게재된 신라옥적

세키노에 이어 신라옥적에 관하여 기록을 남긴 사람은 앞서 언급한 이마니시 류이다. 1906년 가을 그는 경주를 여행하면서 신라옥적을 하룻밤 등 밑에서 실제로 보았다고 한다(今西龍 1933: p.548). 물론 그 장소는 역시 관노방이었다고 생각된다.⁴⁾ 그는 각종 문서를 검토하면서 신라옥적은 “萬波息笛”의 영상으로 진보로 간직하게 되어, 그 전래의 진위나 유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떠나서 일본이 조선의 기념품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今西龍 1933: p.556~557).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마니시의 글에 게재된 옥적의 사진이다(사진 1). 이 사진에 관하여 이마니시는 “당시 울산에서 군직에 있었던 에히메현(愛媛縣) 사람 오니시(大西) 씨가 예전에 촬영한 것을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니시라는 군인이 어떤 경위로 신라옥적을 찾아서 촬영까지 했는지 알 수 없으나 1904년 세키노가 『한국건축조사보고』에서 신라옥적을 소개한 이후 오니시뿐만 아니라 신라옥적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보러 간 일본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주 조선인들은 그렇게 신라옥적이 일본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 세키노와 달리 이마니시는 관노방이 아니라 당시 유일한 일본인 교사 이토 도타로(伊藤藤太郎)의 학교 교실에 묵었다(今西龍 1933: 후기 6). 그 학교가 어디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1899년 설립된 공립 경주소학교의 교사 향교 옥영재(育英齋)였을 것으로 보인다(善生永助 1934: 308).

3) 조용한 암투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둘째 의문, 즉 신라옥적이 왜 쓰레기통과 같은 함에 포장되어 명보를 보관하는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신탄창고에 있었는지 검토해보자.

소네 일행은 미리 세키노나 이마니시로부터 정보를 얻어 관노방에 신라옥적이 보관되어 있는 줄 알고 찾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관노방에 있어야 하는 신라옥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네 일행은 신라옥적을 수색하게 되었다.

그러면 신라옥적을 은밀하게 4중 함에 넣고 관노방에서 신탄창고로 옮긴 사람은 누구였을까? 신탄창고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던 건물인지 알 수 없으나 취사나 난방을 위한 장작이나 숯을 보관하는 창고로 주요 건물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네 일행은 귀한 보물이 그러한 창고에, 게다가 쓰레기통과 같은 함에 있는 줄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조선인이 일본인의 신라옥적 약탈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일부러 옮겨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둔 것이 아닐까.

당시 경주 중심부에는 일본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어, 조선인들은 무력으로 신라옥적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래서 ‘감춤’이라는 궁여지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네 일행은 그것을 눈치채고 신라옥적은 어딘가에 꼭 감춰져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인들의 필사적 저항은 소네 일행의 집요한 수색으로 무산되었으나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신라옥적의 소유를 둘러싸고 ‘조용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오사카는 조선왕조기 유실을 막기 위하여 工房庫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가 소재가 애매해진 신라옥적을 소네 일행이 비로소 ‘발견’한 것으로 서술했는데, 1902년 세키노가 신라옥적을 관노방에서 본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주 고적조사에 깊이 관여한 오사카가 1902년 세키노가 신라옥적을 직접 보고 1904년에 『한국건축조사보고』에 소개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옥적 ‘발견’ 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벌어진 ‘조용한 암투’, 그리고 일본인의 신라옥적 약탈을 행방이 애매해진 신라옥적을 소네 일행이 고생하면서 찾아주었다는 시혜적 영웅담으로 오사카가 윤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라옥적의 반환

1) 이왕가 박물관에 보관된 신라옥적

오사카에 따르면 1909년 소네 일행이 ‘발견’한 신라옥적은 이듬해 경성으로 옮겨져 이왕가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신라옥적이 ‘발견’되고 나서 경주를 떠나기까지 어디서 보관되었는지, 반출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록된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또한 이왕가 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된 신라옥적이 어떻게 전시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왕직 박물관 소장품 사진첩”이 “선인국가” 제일의 “영물”로 소개한 것으로 보아 중요한 유물로 인식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마니시는 “(신라옥적은) 이제 이왕가 박물관에서 진열되어 있다고 들었으나 확실한 것은 모르고...”(今西龍 1933: p.556~557)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게 전시되었거나 혹은 미공개 유물로 보관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소네 일행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낸 신라옥적을 왜 이왕가 박물관이 어중간한 상태로 보관했을까? 일본인 당사자들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볼 때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신라옥적을 경주에서 반출하고 본인의 관리 하에 두므로써 민족의 맥을 끊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이왕가 박물관에서 어떻게 전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둘째, 조선인의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라옥적을 일부러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했다.

그러면 경주 조선인은 신라옥적이 빼앗기고, 경성에서 어중간하게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내면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라옥적을 되찾을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금관총 유물의 발견

신라옥적을 빼앗긴 지 약 12년 만에 그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다. 너무나 유명한 금관총 유물이 발견된 것이 그 계기였다. 신라옥적의 경주 반환에 앞서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1921년 9월 말 경주 시가지 노서리의 언덕에서 도로 공사와 택지개발로 인하여 우연히 금관을 비롯한 신라의 무덤 부장품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출토유물은 옛 신라왕조의 영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그 언덕은 ‘금관총’이라고 불리게 되었다(濱田耕作·梅原末治, 1924).

조선총독부는 이 유물들을 경성으로 반출하여 총독부 박물관에서 보관과 전시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대해서 경주의 유력자들은 반발하여 ‘금관총 출토유물 경주 留置운동’(이하 유치운동으로 약칭함)을 전개했다. 총독부는 경주 주민들의 열성적 반대에 부딪혀 당초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금관총 출토유물은 일시적으로 정리와 조사를 위하여 총독부 박물관으로 이송되었으나 1923년 10월 대부분 경주로 돌아왔다. 경주고적보존회 진열관(1926년 이후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이 됨) 부지에는 그 출토유물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금관고’가 경주지역 주민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었다.

유치운동에 관해서는 지역 이권을 지키려는 모로가 히데오를 비롯한 경주 일본인 유력자가 주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김현숙 2007; 정인성 2009),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명보를 지키려고 한 경주 부호 최준이나 경주 3.1운동을 주도한 박문홍 등의 경주 조선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맡았다(아라키 준 2016; 2019).

3) 유치운동 속의 신라옥적

물론 유치운동은 금관총 출토유물이 경주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벌인 운동이었으나 거기에 신라옥적의 반환도 같이 달성하려고 한 운동이었음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921년 10월 15일 경주 유지들 19명(조선인 10명, 일본인 9명)으로 구성된 ‘경주시민대회 청원위원 일동’에 의해 총독부에 제출된 청원서가 보관되어 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림 3>.

(금관총 출토유물을 원래의 왕릉에서 경성 총독부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양 민족 공통의 고귀한 조상에 대한 신성모독이라 비판을 개진하면서) 예전에 신라 국보의 전설이 전해진 옥적 기타를 당시 위정자가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우리의 특별한 원한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발견한 소중한 유물이 이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感憤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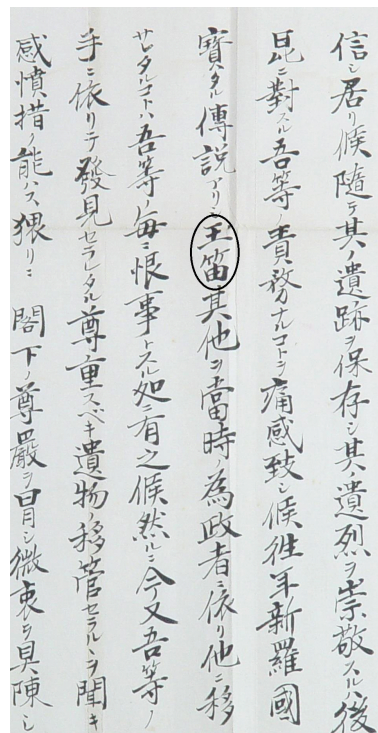


그림 3. 진정서(일부)

이 구절을 통해서 신라옥적 약탈에 대한 원한이 경주 조선인 사이에 잠복하고 있었고, 1921년 유치운동의 기회를 타서 신라옥적도 경주로 탈환할 계획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경상북도청이나 조선총독부와 직접 교섭한 사람은 모로가 히데오였다. 경주 조선인들은 모로가 히데오와 교섭하여 留置 항목에 금관총 출토유물뿐만 아니라 신라옥적을 추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모로가로서도 경주에 신라의 명보인 옥적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유치운동에 경주 조선인의 열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조선인의 의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진정서는 일선 동조론적 입장에서 일본 황실과 연관된 신라왕조의 유물을 함부로 타지로 옮기는 것은 신성모독이 된다고 총독부 정책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글을 작성한 사람은 분명히 일본인이었을 것이다.

경주 조선인들이 그 식민 이데올로기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금관총 출토유물과 함께 신라옥적을 경주에 두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유효한 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약자였던 그들은 모로가 히데오의 정치력뿐만 아니라 ‘일선 동조론’까지 ‘역이용’하여 그들의 염원이었던 신라옥적을 탈환하려고 했다. 경주 조선인에게 유치운동은 금관총 출토유물을 두기 위한 운동인 동시에 ‘신라옥적 탈환 운동’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4) 반환된 신라옥적

신라옥적은 경주 조선인의 의도대로 경주로 반환되었다. 오사카에 의하면 신라옥적은 1923년 금관총 출토유물과 함께 경주로 돌아와 새롭게 지어진 금관고에 보관·전시하게 되었다(大坂六村[金太郎] 1939: p.222).

그러나 1924년 10월 7일자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신라옥적의 반환을 보도했다.

故土에 도라가게 될 신라 雙寶 금관, 옥적

경주고적보존회의 주선으로 미구에 고토로 도라가게 된다.

신라고물 중에도 이름이 높고 세상 사람이 가장 애중하게 생각하는 옥적과 금관은 수천 년 전에 발달된 고대문명의 정화로써 이 두 가지 물건 속에는 여러 가지 전설과 오랜 력사가 숨어있다. …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천과 환란을 지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근근히 보존하여온 옥적과 금관이 지금은 경성 李王職博物館의 한 구석에 진열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가튼 귀중한 유물을 산출한 그 본토에 두지 아니 하고 아모

관계도 인연도 엮는 서울에 갖다둠은 너무도 의미없고 □당한 일이라하야 … 그곳 관민유지가 다시 운동을 개시하야 오래 동안 힘써온 결과로 경주 총독부의 양해를 얻어 … 머지아니하야 문데중(문제중)에 잇던 옥적과 금관이 그리운 경주 고향으로 도라오게 되얏다더라(대구).

이것은 고대문명의 정화 신라옥적이 금관과 함께 1924년 가을에 경주에 반환될 소식을 보도한 기사이다. 그러나 금관총 출토유물이 경성에서 보관된 장소는 이왕직 박물관이 아니라 총독부 박물관이었고, 경주로 반환된 것은 1923년 10월이었다. 이처럼 이 기사에는 사실 오인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다만 『조선일보』가 1년 전의 일을 맥락 없이 보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라옥적에 관해서는 반환이 1년 지연되어 1924년에 성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반환 시기에 관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신라옥적은 무사히 경주로 귀향했다. 그 반환은 경주 조선인의 슬기로운 전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Ⅲ. 일승각과 경주박물관 확장⁵⁾ 운동

Ⅱ에서 검토한 유치운동에서 보인 금관총 출토유물과 신라옥적에 대한 경주 조선인의 주체적 관여는 예외적 사례였을까?

여기서는 1937년 6월 26일 느닷없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경주박물관 확장운동’을 단서로 조선시대 경주 부윤이 집무하는 건물로 높은 위상을 지닌 一勝閣이 철거의 위기를 넘어 보존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적·유물 보호에 대한 조선인의 주체적 관여가 보다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1937년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의 전개

우선 1937년 6월 26일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

5) 먼저 1913년경 경주고적보존회 진열관으로 시작되어, 1926년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승격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주박물관”이라는 공식 명칭은 없었으나, 통칭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경주박물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경주박물관 확장안 류산

경주박물관 확장(확장)문제는 다년간 경주 군민의 요망을 받아오든바 지난 52월(5월의 오기로 보임) 십일경 20여명의 공직자로서 조직된 경주박물관 기성회는 제 1회의의 役員會(임원회의 뜻)에서 단 일명의 출석을 보이며 일반방청인의 타매를 받고 제 2회의에는 좀 더 늘어 … (재정난으로 한 사람의 찬성도 얻지 못해) … 오래 동안 떠들어 오든 박물관확장안도 경주 공직자의 손에서 용두사미로 돌아가자 일반 공직자의 태도에 분개하여 일반군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경주읍의원 손문일(孫汶一), 최기윤(崔基潤) 양씨는 경주읍의원 사임서를 제출하려 한다.

이 기사만으로는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의 동기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운동에 관해서는 총독부 측의 공식문서나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진 바가 없었고, 거의 유일하게 민족신문 『동아일보』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의 내용을 봐도 이 운동은 일본인 사회가 아니라 조선인 사회의 관심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운동에 대한 『동아일보』의 관심은 컸던 것 같다. 다음날인 6월 27일에도 다시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손, 최 양 邑議는 사표까지 제출

일반은 그 추이를 注視

전 경주군청이요 현 경주세무서인 동 청사는 경주박물관으로 이관하여 고적으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하여 현재의 세무서는 다른 데로 이전케 하는 동시에 동 박물관은 대확장을 하자고 하는 의논은 십여 년 전부터의 문제로 되어오든 경주주민들의 요망하여오든 현안이다.

… (박물관의 확장기성회까지 조직되었으나 재정난도 있고 공직자의 참여도 저조해서 거의 실패에 돌아가게 되었다.) …

그것은 일반 공직자의 태만과 무성의한 것이 원인이라 하여 일반의 비난이 만했다.

… (이에 읍의원인 손문일과 최기윤은 읍의원의 사표를 제출하여) … 일반은 문제의 진전을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이 두 번째 기사를 통해 이 운동의 윤곽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그 본질은 한일병합 후 경주군청과 경주세무서의 청사로 사용되고 있었던 조선왕조기 경주의 관아건물 일승각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는 박물관 확장 운동의 이미지를 18세기 말에 제작된 『慶州邑內全圖』위에 그린 것이다. 이 운동은 조선시대의 내아 부근에 생긴 경주박물관을 확장하여 일승각⁶⁾까지 포함시키려는 운동이었다.

6) 「경주읍내시가약지도」에는 一勝亭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문서는 一勝閣과 一勝亭이 혼용되었는데(조철제 2018a: p.147), 여기서는 일승각으로 통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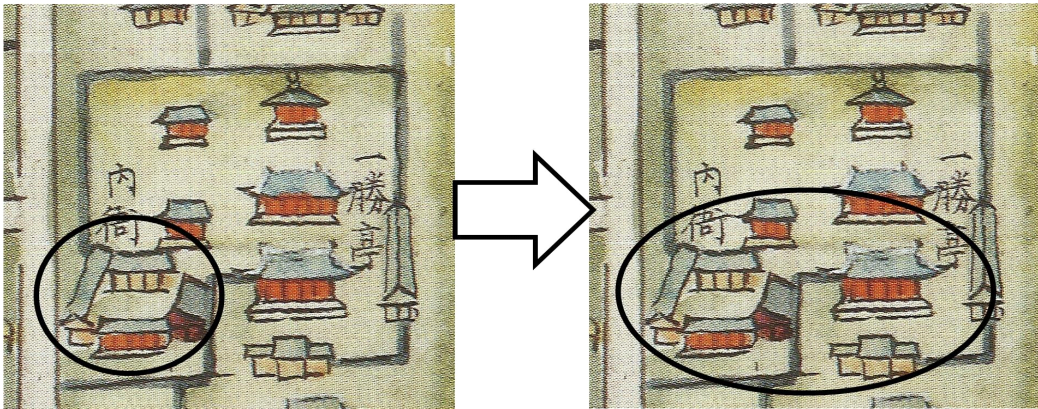


그림 4. 박물관확장운동의 이미지

『동아일보』에 또다시 7월 2일에 ‘박물관 확장안 실패를 보고’라는 논단 기사가 게재되었다.

지방논단

박물관 확장안 실패를 보고

경주 지국 一記者

경주 군내의 도의원, 읍의원, 학교조합평의원 등 近 30명으로 조직된 경주박물관 확장기성회는 그간 12인의 不休不眠의 활동도 수포에 도라가고 고적으로 그의 보존을 요망하여오든 구 경주군청사도 헐리고 그의 기지는 세무서의 신축기지로써 不遠間 樂浪府의 간판조차 철폐치 아니하면 아니될 운명에 이르렀다. 공직자들만을 믿고 있는 일반국민은 크게 놀래어 지방의 중대문제로서 여론이 沸騰하여 여기에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읍의원 최기윤, 손문일 양 씨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읍의의 사표까지 제출하여 문제의 진전은 일반에 만흔 흥미를 던지고 있다. … (이하 공직자를 비판하는 글로 이어짐)

이상과 같이 『동아일보』에 세 번이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면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은 경주사회 특히 조선인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결국 실패했으나 조선인들이 주도한 운동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그 배경에 관해서 살펴보자.

2.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의 배경

앞의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이 운동의 주요 목적은 경주박물관 옆에 있었던 세무서 청사, 즉 조선왕조기의 경주 관아의 중심건물이었던 일승각을 보존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지역사회에서 일승각이 지닌 위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조선인들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일승각의 위상과 그 변화

조선왕조기의 일승각은 경주 부윤의 직무 공간인 동헌이었다. 건축물로서의 위상은 태조의 생령인 어진이 예전에 봉안되었던 집경전구기,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있었던 동경관(객사)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조철제 2018a: p.134). 18세기 말에 제작된 『경주읍성전도』에도 집경전(임란 때 소실)의 터를 나타낸 집경전구기비의 비각 그리고 동경관(객사)과 함께 일승각은 크게 그려져 있어 그 높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1).

일승각은 1894년 경주부가 경주군이 되어도 그대로 군수의 집무공간으로 사용되었고,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도 ‘경주군청’으로 사용되었다. 한일병합 직전 1909년 6월에 일본인 서기로 경주군청에 부임한 기무라 시즈오(木村靜雄)는 당시 일승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木村靜雄 1924: p.20).

현관은 3척 가량의 돌로 된 계단 위에 있고, 바닥은 5척의 높이에 마련되어 있어 올려다볼 만큼 장려한 건물로 보인다 … 이것이 내가 집무하는 곳이라 생각하니 어쩐지 과분한 느낌이 든다. (화려한 단청을 보고) 京都의 사찰에도 이것에 비견할 색채의 건물은 없다. (실내에는 액자나 시판[詩板],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어) 莊重한 느낌이 생겨 다시 왕조의 기분으로 돌아갈 것 같다.

아무리 조선왕조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더라도 경주군 행정의 중심인 일승각은 여전히 일본인 공무원을 압도할 만큼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사진 2).⁷⁾

7) 〈사진 2〉는 병합 직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가운데에 크게 ‘一勝閣’이라 적힌 편액이 걸려 있고, 양쪽 문설주에는 ‘羅代千年之都’, ‘聖朝貳卿之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貳卿(이경)’은 경주 부윤의 품계와 직위를 나타낸 말이라고 한다(조철제 2018a: p.148). 다만 ‘卿’자는 ‘鄉’자로도 판독이 가능하며, 그 문설주를 실제로 본 기무라 시즈오는 ‘貳鄉(이향)’으로 읽었다(木村靜雄 1924: p.19). 이 경우 ‘貳鄉’을 신라의 고도 경주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나 고려의 수도 개성, 혹은 태종의 본관 전주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鄉’에는 ‘시골’의 의미가 강하며 문맥상 약간 어울리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 어느 쪽이 타당한 판독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신라의 고도에서 살아온 경주 조선인들의 강력한 지역적 자부심이 투영된 문구임이 틀림없다.

기무라는 일승각에 들어가기 전의 경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木村靜雄 1924: 19).

(일승각 앞에) 中門이 있고 ‘樂浪府’의 扁額을 본다. 한사군에 낙랑군이 있지만 … (경주와 위치가 달라) … 이것은 무엇인가의 擬稱일 것이다.



사진 2. 一勝閣의 옛 모습
(東洋軒寫眞館: 발행연대 불명)

기무라는 경주의 별칭에 ‘樂浪’이 있음⁸⁾을 몰라서 ‘낙랑부’를 ‘의칭(가짜 명칭)’으로 생각한 것 같다. 이 ‘낙랑부’ 편액은 앞서 언급한 1937년 7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등장한다. 이 기사에는 세무서의 건물(일승각)이 허물어지면서 ‘낙랑부’ 현판도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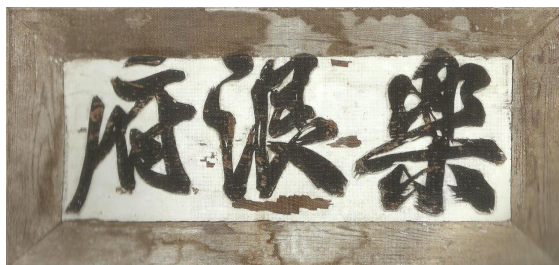


사진 3. ‘낙랑부’ 명 현판(국립경주박물관 2013: p.38)

이상 기무라의 회고와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서 일승각 앞의 중문에 ‘낙랑부’ 편액이 걸려 있었고, 1937년 당시 일승각이 세무서 청사로 사용되었을 때도 그 건물의 어딘가에 걸려 있거나 보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까지는 ‘낙랑부’라는 명칭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편액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낙랑부’ 명 현판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사진 3).⁹⁾ 오늘날 ‘낙랑부’의 ‘특별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전승이 끊어져서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¹⁰⁾

조선왕조기의 경주를 대표하는 건물인 일승각은 일제강점기 경주군청의 청사로 사용되었고 1934년 말경에 동경관 남쪽 현 탐마트, 동경관(객사) 남쪽 부지의 위치에 신청사가 건립

8) 경주에는 ‘계림’, ‘월성’, ‘낙랑’ 등의 별호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왕조 마지막 왕인 경순왕(김부)이 고려에 항복하여 고려 왕건이 딸 ‘낙랑공주’를 김부와 혼인시킨 바가 있다. ‘낙랑’ 별호를 이것과 관련시키는 견해가 있으나 확실한 경위는 알 수 없다(조철제 2018c: p.379).

9) 이 현판은 상설전시물이 아니지만 2013년 개최된 특별전 ‘조선시대의 경주’에서 전시된 바가 있다. 도록의 해설문에는 “걸려있던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으나, 음성 내 관아의 건물에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되어 있는데(국립경주박물관 2013: p.38), 조선후기에는 일승각 중문에 걸려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10) 이용현은 개인적인 대화에서 연구자에게 ‘낙랑’에는 선진성이나 세련됨의 함의가 있었다고 지적해준 바가 있다. 각주 8)에서 논한 “貳鄉”은 이 현판과 관련하여 경주부와 낙랑부를 가리킨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사진 4. 신축된 직후의 경주군청(G씨 제공)

동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2) 月城衙門의 철거



사진 5. 월성아문(경주문화원 1994)

음을 의미한다.

경주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1912년경 읍성 남문을 허물고, 1915년에 경주고적보존회 진열관에 신중 종각과 기타 조선왕조기의 건물을 옮기고 진열관 시설로 전용하는 등 조선왕조기의 건축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고, 일승각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되어〈사진 4〉,¹¹⁾ 경주군청이 이전됨에 따라 1935년경부터는 경주세무서 청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왕조기 경주부윤의 집무 공간으로 숭고한 의미를 지녔던 일승각은 일제강점기 단순한 실무 청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조선왕조기의 전통건축물은 세무서의 청사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것을 허물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승각을 지키기 위한 경주박물관 확장 운

그런데 『동아일보』 1937년 6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박물관을 대확장하자는 논의 중에 “십여 년 전부터의 문제로 되어오든 경주주민들의 요망하여오든 현안”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경주군청 신청사가 신축되고 세무서 청사가 된 일승각의 해체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1934년보다 훨씬 이전인 1920년대부터 일승각을 보호하기 위한 박물관 확장 문제가 거론되어 왔

11) 『동아일보』, 1934년 7월 20일자. 1934년에 신축된 경주군청 청사는 〈사진 4〉와 같이 2층의 신식 목조건물이었다. 1929년에 경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그 건물을 기억하는 G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청사는 크기와 화려함으로 주위를 압도했다고 한다.

그 예감이 현실로 다가온 징조가 1935년경에 일어났다. 月城衙門의 해체이다. 월성아문은 조선왕조기 경주 관아의 첫 번째 건물이자 일승각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루였다(그림 5). 월성아문 2층에는 북이 걸려 있어 조선왕조기 관아 문을 여닫을 때 먼저 남문 밖에 신종을 치고 그것에 호응하여 월성아문의 북을 쳐서 관민에게 시간을 알렸다고 한다. 월성아문의 중문은 부윤이 이용하고 좌우 문은 서리와 일반 사람이 이용했다. 월성아문은 관아공간으로 들어가는 현관 역할을 담당한 위상이 높은 건축물이었다(조철제 2018a: p.136-137).



그림 5. 월성아문의 위치

월성아문 해체에 관한 문서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G씨가 유년기 그 해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월성아문은 아주 훌륭한 문이었다. 지금의 3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있었다. 거기는 어릴 때의 놀이터였다. 2층에는 찢어졌지만 커다란 북이 있었다. 이것이 철거된 것은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6살 때(1935년경)였다. 철거작업은 조선인들이 하고 있었다. 너무 굵은 통나무들을 네 사람이 맞춤 소리를 지르면서 나르고 갔다.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조선인을 달랬는데 결국 다시 짓지 않았다. 그 나무들은 동경관 옆의 공터에 쌓아올려져 있었는데, 나는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G씨에 의하면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월성아문을 철거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 그 부지는 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승용차가 다니기 쉽게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G씨는 아직 어려서 그 해체를 보고 일본인에 대한 반감은 생기지 않았으며 오직 놀이터가 없어진 사실이 슬펐다고 한다.

그러나 경주 조선인 어른들 사이에는 일승각의 현관이었던 월성아문의 철거는 큰 분노와 상실감과 더불어 일승각의 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3) 조선인들의 전통 고수 전략



사진 6. 동경관(객사)의 옛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일승각의 불안정한 처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의 조선왕조문화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했다. 조선고적조사를 초기부터 주도한 세키노 다다시는 조선왕조문화를 거의 무시하여 읍성 내의 조선왕조 건축물로는 동경관(객사, <사진 6>)만 ‘을’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아예 고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3층 건물만큼이나 높이가 있는 훌륭한 문루였던 월

성아문을 고적으로 인지하지 않았던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부당한 처사로 보이는데, 그만큼 세키노의 시각이 ‘조선 정체성론’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주 조선인의 논리는 물론 일본인의 논리와 달랐다. 앞서 제시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통해서 일승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조선왕조기의 정서가 1930년대에도 조선인 사이에 계승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국권 상실의 아픔과 민족의식의 고양도 작용하여 일승각은 경주 조선인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축물이 되었다.

풍전등화의 일승각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아마도 먼저 조선인들이 착상한 것은 일승각을 ‘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들이 경주에 들어오면서부터 고대 신라의 유적·유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적’으로 후하게 보존하는 모습을 보고 ‘고적’의 등록 유무가 유적보존의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조선왕조기 건축물에 대한 태도로는 일승각이 ‘고적’으로 등록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착상된 것이 박물관 확장 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읍성 내의 조선왕조기 ‘非古蹟’ 건축물로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은 경주박물관에 있는 관아 건물밖에 없었다. 일제하 경주박물관은 일본인들 중심으로 운영되어 그 이득도 일본인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주 조선인들이 진심으로 경주박물관 확장을 원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들의 본심은 오직 ‘일승각 보존’에 있었다. 다만 조선인들이 ‘일승각 보존 운동’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운동을 벌였을 경우 조선시대에 대한 향수나 민족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본인 측의 경계심을 바로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경주박물관 확장’이라는 박물관에 관련된 이권을 독점한 일본인의 동의를 얻기 쉬운 슬로건을 고안하여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논

리나 정책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면서 일승각 건물을 보존하기로 도모한 것이다.

3. 보존된 일승각

결과적으로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은 일본인 측의 협조도 얻을 수 없어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실패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무서의 신청사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일승각을 허물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일승각은 읍성 남쪽의 고분군 가운데로 이축되어 기림사 경주 포교당이 되었다. 그 경위는 복잡다단한데, 구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경주의 만석꾼 정두용(鄭斗鎔)의 아들 정영호(鄭永浩)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뒤 서른한 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아버지 두용과 영호의 아내 배금란(裴金蘭)이 영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일승각이 경매물로 나왔다. 대구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러 왔는데, 정두용이 萬金을 마련하여 일승각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정두용은 높은 위상을 지닌 일승각을 본인 땅(노동동 275번지)으로 이축했다. 이것이 기림사 포교당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불국사 포교소가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 法藏寺라 불리게 되어 오늘날에 이른다(조철제 2018a: p.150).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투입하여 일승각을 매입하고 이축한 끝에 기림사에 인계했다는 이야기인데, 다소 믿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북지역의 조선 불교계가 발행한 기관지 『慶北佛教』1938년 9월 1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대본산 기림사

경주 포교당 奉佛式

경주군 대본산 기림사에서는 구 경주 객사 대건물¹²⁾을 購得하여 경주읍 노동리에 年餘의 長歲月間 포교당을 건축하다니 … (법당 공사를 마치고) … 去 8월 6일(1938년 8월 6일) … 봉불식을 거행하였다는바 …

위 기사에서는 일승각을 낙찰한 주체는 기림사로 되어 있어 정두용이 낙찰했다는 위 구전과 엇갈린다.

현재 법장사 경내에는 정영호의 명복을 빌기 위해 1938년 8월에 건립된 불망비가 세워져 있다. 그 비문에 건립자로 정두용과 배대연화(裴大蓮華, 배금란의 법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정두용과 배금란이 일승각의 이축과 기림사 경주포교당 설치에 관여한 것은 확실하다.

12) 일승각의 착오임이 확실하다.

또한 『경북불교』기사에는 경주포교당의 大施主로 배대연화가 소개되어 있다. 대연화는 2천 엔과 범종 대좌를 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두용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정두용 및 배금란(대연화)과 기림사 사이에 어떤 교섭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명확한 것은 정두용 혹은 기림사가 1937년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이 무산된 뒤 일승각을 낙찰하여 이축하고,¹³⁾ 기림사 경주포교당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인 측은 월성아문처럼 일승각을 허물지는 않고 경매에 부쳤다. 이 경위에 관해서는 문서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승각을 매각함으로써 국가 재원에 환납하려고 했다.¹⁴⁾ 둘째, 만약 일승각을 철거할 경우 경주 조선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회유책으로 이축을 조건으로 남기기로 했다.

경주박물관 확장 운동은 실패했으나 일승각 건물이 사찰이라는 형식으로라도 오늘날 보존되게 된 데에는 경주 조선인들의 열성과 슬기가 작용한 것은 확실하다<사진 7, 8>.



사진 7. 경주군청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일승각
(경주문화원 1994)



사진 8. 범장사(필자 촬영)

일승각 건물의 이축을 1931년에 제작된 「경주읍내 시가약지도」 위에 그려보면 <그림 6>과 같다. 일승각 건물은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축되었다. 이것을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경주읍내전도」 위에 그려보면 <그림 7>과 같다. 이것을 보면 일승각 건물은 읍성 밖으로 완전히 떨어진 위치에 고분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기 일승각의 위상을 아는 경주 조선인에게 그 모습은 양가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즉 건물이 보존되었다는 안도감과 일본인에 의하여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굴욕

13) 구전으로는 1935년에 이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이축시기는 1937년이다.

14) 조선왕조 소유의 땅과 건축물은 병합 이후 자동적으로 일본의 국가재산으로 편입되었다. 일승각도 그 부지를 포함해서 국유재산이 되어 있었다.

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러한 ‘탈맥락화’가 생기더라도 일승각 건물을 보존하려는 경주 조선인들의 마음은 절실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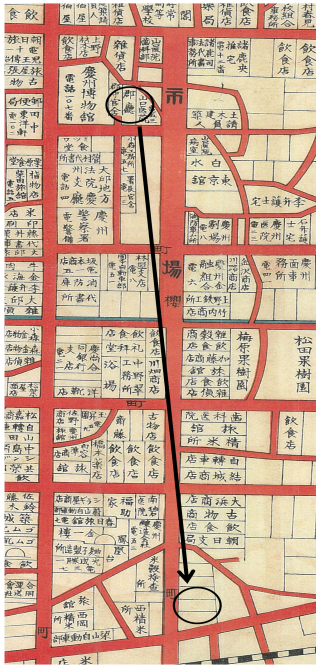


그림 6. 일승각 건물의 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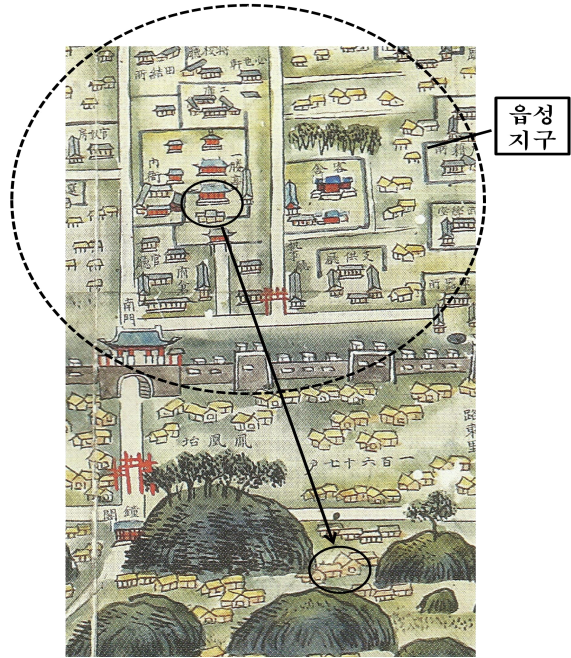


그림 7. 「경주읍내전도」위에 그린 일승각 건물의 이축

IV. 맺음말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일본인들은 조선의 유적·유물에 대한 고적조사를 실시하여 본인들의 논리에 맞추어 유적·유물을 해석하고 식민통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지금까지의 고적조사 연구에서는 주로 그러한 일본인들의 논리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 조선인은 수동적 객체로 그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미시사적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경주 신라옥적과 일승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이 간직해온 유적·유물을 반출 훼손하려는 일본인과 그것을 막으려고 한 조선인 사이의 경합을 분석하여, 역사적 주체로서 조선인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당시 정치적 약자였던 조선인들은 유적·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행사나 시위와 같은 직접적 수단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유물을 감추거나 일본인 유력자의 정치력이나 식

민통치 이데올로기까지 역이용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 반출된 신라옥적은 경주로 탈환할 수 있었고, 일승각은 비록 이전되어 사찰로 활용하게 되었으나 건물은 남길 수 있었다. 그 과정과 전략은 뚜렷한 윤곽을 잡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지금까지 연구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주체적인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과 평가가 요구된다.

본고에서 논한 신라옥적이나 일승각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유적·유물을 지키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이다. 유적·유물은 수동적인 객체로서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조선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누적되면 조선고적조사에 대한 또 다른 역사연구 분야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한매일신보』

『慶州邑內全圖』

東洋軒寫眞館, 발행연대 미상, 『朝鮮慶州ALBUM』.

朝鮮情報協會, 1931, 「慶州附近古蹟案内」·「慶州邑內市街畧地圖」.

곽차섭, 2000, 『미시사란 무엇인가』(푸른역사).

경주문화원, 1994, 『경주의 옛 사진집』.

국성하, 2004,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낙랑군 인식과 평양부립박물관 설립」, 『고문화』 Vol.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09-127쪽.

김현숙, 2007,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의 발족과 활동」,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 靜齋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561-584쪽.

국립경주박물관, 2013, 『조선시대의 경주』.

목수현, 2000,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美術史學研究』 227, 81-104쪽.

아라키 준, 2016, 「일제식민지기 금관총 출토유물을 둘러싼 다층적 경합」, 『한국사연구』 No.174, 한국사연구회, 267-320쪽.

_____, 2018, 『식민지기 경주 유적·유물의 미시정치: 다양한 이항대립의 교차』(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_____, 2019, 「경주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경주제일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와 역사』No.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49-185쪽.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09년 경인문화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간행되었음).

전경수, 1998,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탈맥락(脫脈絡)화 再맥락화(再맥락化), 『韓國 人類學의 成果와 展望』, 집문당, 661-716쪽.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경주고적보존회(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대구사학』Vol.95, 대구사학회, 1-39쪽.

조철제, 2018a, 「경주 동헌(東軒)」, 『경주읍성과 관부 ①논총』,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134-153쪽.

_____, 2018b, 「신라옥적(新羅玉笛)」, 『경주읍성과 관부 ①논총』,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339-364쪽.

_____, 2018c, 「경주부 편액(扁額)」, 『경주읍성과 관부 ①논총』,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378-385쪽.

- 최석영, 1999, 「조선충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 『역사와 담론』 Vol.27, 호서사학회, 93-125쪽.
- 함순섭, 2009, 「조선충독부박물관 분관과 부립박물관 1. 조선충독부박물관 경주분관」, 『한국 박물관 100년사: 1909-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148-159쪽.
- 함한희, 2003, 「타문화로서의 과거」,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271-277쪽.
- 황수영, 1973, 『일제기문화재피해자료(고고미술자료 제22집)』(한국미술사학회).
- 今西龍, 1933, 『新羅史研究』(國書刊行會).
- 大坂六村(金太郎), 1939, 『趣味の慶州』(財團法人 慶州古蹟保存會).
- 姜東鎮, 1979,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1920年代を中心として』(東京大學出版會).
- 木村靜雄, 1924, 『朝鮮に老朽して』(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支部).
-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 關野貞, 2009, 『關野貞日記』(中央公論美術出版).
- 善生永助, 1934, 『生活狀態調査(七) 慶州郡』(朝鮮總督府).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古蹟調査特別報告3-1 本文上冊), 京城: 朝鮮總督府.
- 諸鹿央雄, 1935, 「故關野博士と朝鮮慶州」, 『夢殿』 14 別卷(關野博士追悼集), 鵜故郷舍.
- 李王家博物館, 1918,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下』.

The Illicit Export and Destruction of Artifacts from Gyeongju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Korean Reactions
– with Focus on the Examples of the Jade Flute of Silla and Ilseunggak –

Araki Jun*

The Japanese undertook investigations of the sites and artifacts of Joseon around the time of Korea's annexation by Japan, and interpreted the material as a means of justifying colonial occupation. Previous research on the practices of Historic Sites Investigation have tended to focus on the logic and actions of the Japanese, and Koreans have resultingly been regarded as passive subjects. Such an approach contains the possibility of reproducing the problematic historical perspective in which the active agency of the Korean people is overlooked.

The present article adopts a micro-historical approach, focusing on the Gyeongju region (which, along with Pyeongyang, was where Historic Sites Investigations were most intensively undertake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order to identify and highlight the logic and resistance of the Joseon people at the time. In particular, Japanese attempts to illicitly export or destroy the 'Jade Flute of Silla', which was regarded as a treasure by the Korean people, and Ilsunggak, a highly revered place that had served as the office of the Mayor of Gyeongju in the Joseon Period, and Korean attempts to resist such actions are examined as a means of highlighting the historical agency of the Korean people.

Korean people, who lacked political power at the time, found it difficult to adopt direct means of resistance, such as force or demonstra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cultural heritage. Therefore, other strategies were adopted, such as hiding artifacts or turning upon its head the ideology of colonial rule or the political power of Japanese figures of authority. As a result of this, the Jade Flute of Silla, which had been smuggled out to Seoul, was returned to Gyeongju; Ilsunggak was preserved by being relocated and its buildings reused as temple buildings. As such strategies tended to be vague in nature, it has been difficult until now to establish them as objects of research.

However, artifacts and sites can provide a channel into highlighting how Koreans were active agents in the determining the course of history, and not merely passive subjects. The case studies of the jade flute of Silla and Ilseunggak discussed in this paper represent the tip of the iceberg in attempts made by Koreans to protect their cultural heritag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t is hoped that the accumulation of in-depth analyses of detailed examples will act to open a

* Visiting Schola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Studies

new avenue of research on Historic Sites Investigation activities.

Key words :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Historic Sites Investigation, Gyeongju, Jade flute of Silla,
Ilsunggak, Geumgwanchong Tomb